

법조

검찰, '경찰총장' 윤 총경 피의자 신분 소환...버닝썬 의혹 전반 살펴볼 듯

박현익 기자

입력 2019.10.04 11:46 | 수정 2019.10.04 14:46



조국(왼쪽)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행정관이었던 윤모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. /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 제공

검찰이 '버닝썬 사건'에서 수사 정보를 빅뱅 '승리' 측에 알아봐 준 윤모(49) 총경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.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사 대표 관련 수사를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'공짜 주식'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. 또 최근 경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경찰 유착 의혹을 고의로 덮었다는 최초 고발자의 폭로가 나오며 검찰은 버닝썬 의혹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.

서울중앙지검 형사3부(부장 박승대)는 4일 오전 윤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. 윤 총경은 최근 6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정모(45) 전 녹원씨엔아이(전 큐브스) 대표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. 정 전 대표는 지난 19일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.

그는 또 조국 법무장관 일가(一家)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(PE)와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.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 전지업체 WFM이 윤 총경이 5000만원을 투자했던 큐브스에 8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이다. 이뿐만 아니라 현 WFM 대표는 전 큐브스 직원이다. 이를 근거로 검찰은 코링크PE가 WFM에 투자한 배경에 정씨와 윤 총경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

경찰이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을 압수수색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